

1.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.
- ② 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담보물권인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한다.
-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그 등기 이후에 성립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.
-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채권은 그 주택에 대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.

2.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.
- ② 부(父)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, 태아의 인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상속권은 물론이고, 대습상속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.
- ④ 태아는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만,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다.

3. 신의성실의 원칙(신의칙)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신의칙은 개별적인 권리·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엄격성을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.
- ② 신의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명확하지 아니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.
-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- ④ 적법한 위임 사무처리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, 그러한 약정은 전부 무효로 된다.

4.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.
- ② 자연인이 사망하면,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관계가 종료한다.
-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그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반증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다.

5.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제한능력자제도는 법률행위는 물론이고,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.
- ② 제한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-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측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

6.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제한능력자측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여 그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.
- ②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③ 피성년후견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④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취소권이 배제된 경우, 제한능력자 본인은 물론이고 법정대리인도 행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

7.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.
-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통의 관리행위(제118조에 규정한 권한 내의 행위)를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, 이를 초과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, 그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처분행위를 한 후에 받은 경우는 효력이 없다.
- ④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.

8.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실종선고에 기한 사망 간주의 효력은 그 선고절차에 참가한 사람에 한하여 미친다.
- ②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.
- ④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.

9.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?

- ① 본인
- ② 검사
- ③ 미성년후견인
- ④ 성년후견감독인

10. 주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라 하며,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.
- ②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.
- ③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.
- ④ 가주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후에 행하여지는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.

11. X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하청업체를 방문하던 중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. 甲이 乙을 친 행위는 「민법」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.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이므로, X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② 甲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, 甲은 X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乙은 X법인과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, X법인의 채무와 甲의 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.
- ④ 乙의 상해에 대하여 X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,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
12. 법인의 등기 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설립허가의 연월일
- ② 이사의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
- ③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
- ④ 자산의 총액

13.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해산으로 소멸한다.
- ②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사단법인은 물론이고 재단법인도 해산된다.
- ③ 사단법인의 사원이 1인만 남겨진 경우이더라도 해산사유가 아니다.
- ④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, 정관으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.

14.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건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다.
- ㄴ.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ㄷ.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는 아니며, 온천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ㄹ.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해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실행되어 있으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.

- ① ㄴ, ㄷ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
15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.
- ② 종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면 그 효과는 종물에도 미친다.
-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.
-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.

16. 권리의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, 이는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.
- ② 甲이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乙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.
- ③ 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는 것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.
- ④ 甲의 청약과 乙의 승낙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, 乙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한다.

17. 甲은 그 소유의 산악용 자전거를 98만 원에 팔려고 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89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. 乙이 甲의 진의를 알지 못한 경우, 이 매매계약이 89만 원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?

- ① 유추해석
- ② 규범적 해석
- ③ 자연적 해석
- ④ 보충적 해석

18. 다음 중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」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
- ②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
- ③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약정
- ④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

19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2024년에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
-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
- ③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
- ④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,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

20.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丙으로부터 이중 매도를 적극 권유받은 甲은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乙은 丙에 대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乙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④ 丙으로부터 X토지를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, 제3자는 위 이중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.

21.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.
- ② 비진의표시의 ‘진의’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비진의표시에 관한 「민법」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.
- ④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.

22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,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③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라도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
23.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을 가장매도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자
-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
- ③ 가장채무를 선의로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
- ④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

24.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근저당권설정 계약체결 시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.
- ②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,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
25. 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.
-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,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.
- ④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, 채권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.

26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의사표시가 기재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- ③ 행위능력 있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,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.
-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, 의사표시는 「민사소송법」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

27.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피한정후견인은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.
-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건의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- ④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.

28.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.
- ②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③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.

29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.
- ②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‘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.
- ③ ‘권한을 넘은 표현대리’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- ④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것은 ‘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’에 있어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.

30.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?

- ① 대리인의 사망
- ② 대리인의 파산
- ③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
- ④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

31.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- ②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,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, 그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④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무권대리에 대해 추인 여부의 응답을 최고한 경우,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
32.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ㄱ.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한다.
ㄴ.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.
ㄷ.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ㄷ

33.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- ②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③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자가 되기 전에 한정후견인이 그 피한정후견인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한 경우, 그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④ 표의자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익을 보류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, 그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
34.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?

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(㉠)년 내에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(㉡)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- ① ㉠ 3, ㉡ 5
- ② ㉠ 3, ㉡ 10
- ③ ㉠ 5, ㉡ 10
- ④ ㉠ 10, ㉡ 20

35.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.
-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
-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
36.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③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기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.
- ④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
37.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간을 시, 분,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.
- ② 기간을 연(年)으로 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.
-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익일로 만료한다.
-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
38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.
- ② 매수인이 목적물인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③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④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, 그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39.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채권은?

- ① 여관의 숙박료 채권
- ②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
- ③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
- ④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

40.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,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.
- ②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.
- ③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.
- ④ 원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 전에 그 원금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.